

법령 I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주무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61세의 의사 甲
 - ② 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류관리 기술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19세의 乙
 - ③ 일본의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취업준비 중인 대한민국 국민인 40세의 물리학자 丙
 - ④ 호주로부터 동물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丁

-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권한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 ㄴ. 주무부장관이 직접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 ㄷ.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대상물자 소유자에 대한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권한
-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한 권한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체에 대한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다.
- ②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어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에 동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에 부착된 지정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하여 그 효용을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주무부장관은 정부 비축 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 등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물자의 수리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을 명하는 경우
- ㄴ.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의 장에게 기술의 개발을 명하는 경우
- ㄷ.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 비축 물자가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
- ㄹ. 주무부장관이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하는 경우
- ㅁ.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체 비축 물자가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훈련과 다른 훈련 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동시관리훈련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물적자원훈련
- ㉢ 인력자원 대상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 ① ㉠은 ㉣보다 우선한다.
- ② ㉡은 ㉢보다 우선한다.
- ③ ㉡은 ㉣보다 우선한다.
- ④ ㉢은 ㉠보다 우선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실시명령 및 훈련통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 시·도지사등은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 ㄴ.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업체의 임원이 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제때에 하지 않고 늦게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 ㄷ.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는 그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물적자원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없다.
- ㄹ. 동시관리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대상물자가 특허권인 경우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훈련대상물자인 동산의 소유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④ 자가전기통신설비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 개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유실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직계 존속의 위독으로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를 하기 어려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훈련대상 업체가 휴업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ㄷ.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한 경우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있다.
- ㄹ. 훈련실시대상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이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2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는?

- ① 사용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의 훈련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③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시설을 보강하고 확장하라는 주무부장관의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가 작성하는 기본지침에는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업체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의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는 국무총리가 부과·징수한다.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한 물자의 노후화로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물자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ㄴ.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ㄹ.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법제처장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이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 ㉣.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 ① \neg , L , C
② \neg , L , R
③ \neg , C , R
④ L , C , R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장비를 비치·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점유자에게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 ② 읍·면·동장은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하 양수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명할 수 있고, 그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위해 소방과 방공 장비를 비치할 경우 그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직장 민방위대 대원 甲이 재해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ㄴ. 지역 민방위대 대원 乙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ㄷ. 민방위기술지원대 대원 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 丙은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 ㄹ. 직장 민방위대 대원 丁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관할 읍·면·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 B면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기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을 받은 지역 민방위대 대원 甲은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고자 한다.

- ①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에 해당한다.
- ② A군의 군수가 ㉡을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B면의 면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B면의 면장은 관할 민방위 대장에게 ㉢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B면의 면장은 ㉣을 이유로 甲의 동원을 직권으로 미룰 수 있다.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2018. 1. 17. 민방위대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甲은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신청을 하였으며 그 부상의 치료로 인해 750일 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한편, 甲은 위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용 당시 시가 3천만 원인 자신의 중장비를 사용하였다.

— <보 기> —

- ㄱ. 甲이 동원에 사용한 중장비의 연간 사용료는 300만 원으로 한다.
- ㄴ. 甲이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의 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 ㄷ.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면, 甲이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보상금은 7천 5백만 원이다.
- ㄹ. 甲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甲에게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甲 ~ 丙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을 옳게 비교한 것은?

-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 설치한 대피호 안내표지판을 제거하였으며 과태료의 가중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 직장 민방위 대장인 乙이 직장 민방위대의 명의를 변경하였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가중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 丙이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가중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 ① 甲 > 乙 > 丙
- ② 甲 = 乙 = 丙
- ③ 乙 = 丙 > 甲
- ④ 丙 = 甲 > 乙

문 22.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집행 계획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본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시·도계획은 시·도지사가 집행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시·군·구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군·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이를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문 24. 「민방위기본법」의 벌칙상 법정형이 동일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적법한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ㄴ. 타인을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된 사람의 민방위 대원 동원을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한 경우
- ㄷ.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청장의 적법한 민방위 준비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ㄹ.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직장 민방위대 대원을 갈음하여 직장의 장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등화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의 빛을 내는 설비 또는 장비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하는 것
- ② 보상금 지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
- ③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가로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경계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하는 것
- ④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는 것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 ㄴ. 중대 규모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없다.
- ㄷ.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고, 연대·대대·중대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 ㄹ. 소속 기관장이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문서 송수신 체계에 따라 보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 ① \neg, \sqsubset
② \sqcup, \sqsubset
③ \neg, \sqcup, \sqsubset
④ $\sqcup, \sqsubset, \sqsupset$

문 27.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거주지 이전 후 신거주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ㄴ. 국방부장관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ㄹ. 국방부장관은 동원 보류대상자가 아닌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경우에는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 ① \neg , \sqsubset
② \sqcup , \sqsubset
③ \sqcup , \sqsupset
④ \sqsubset , \sqsupset

문 30. 2020. 3. 12. A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였다.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해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수탁경찰서장 甲은 주민의 피난 명령 및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들의 재산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이 A지역 주민의 재산을 긴급하게 제거하기 위해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 및 게시하였더라도, 재산을 제거당하는 본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ㄴ. 甲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휘 계통에 따라 그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ㄷ. 甲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乙을 검문하여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ㄹ. 재산을 제거당하여 손실을 입은 주민 丙이 보상금 지급을 2020. 4. 7. 신청하였고, 며칠 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丙은 2020. 5. 7.까지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문 3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지역예비군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되었다.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이던 甲은 2017. 10. 1.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30개월 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줄곧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甲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상 甲의 전역 당시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보상금은 6,000만 원이고, 병(兵)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보상금은 5,000만 원이다.

- ① 甲은 6,000만 원을 장애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甲은 장애보상금 5,000만 원뿐만 아니라 휴업 보상금을 재해보상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甲은 24개월을 한도로 하여 결정된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甲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상이(傷痍)로 인해 사망한 경우, 甲이 받는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문 32.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던 A군부대 소속 예비군대원 甲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였다. 그런데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민간 의료시설인 B병원(병원장 乙)에서 치료를 받았고, 甲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퇴원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乙은 A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甲에 대한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는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甲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 ④ 甲이 퇴원 후 부상 후유증으로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乙은 A군부대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甲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 33.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을 받고 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의 사용자가 甲이 훈련을 받은 날을 정당한 사유 없이 휴무로 처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甲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甲이 훈련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가족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된다.
- ㄹ. 훈련 중 부상당한 甲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34.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과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장예비군이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합하여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예비군을 직접 해체할 수 있다.
- ②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으로부터 해당 직장예비군을 해체할 것을 신청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 대원을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 ④ 직장예비군부대가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3개월 이상 임용하지 않은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

문 3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과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
- ㄷ.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원 연기사유와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사유는 동일하다.
- ㄹ. 국방부장관이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동일하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36. 예비군법령상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임군부대의 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무기의 유지와 관리
- ②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 ③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 ④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

문 37. 예비군법령상 지역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장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
- ㄴ. 지역방위협의회는 각급 출장소 단위로는 설치·운영할 수 없다.
- ㄷ. 지역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ㄹ.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지역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해양수산부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ㄴ. 행정안전부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ㄷ.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
- ㄹ. 환경부 - 조류(藻類) 대발생(적조에 한정)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서면으로 알린 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42.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乙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A시에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감염 발생으로 극심한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乙의 건의를 받아야 한다.
- ② 甲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된다.
- ③ 乙이 재난사태가 선포된 A시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하려면 甲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甲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④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②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③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에 한한다.
- ④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의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및 재난관리의무 위반행위의 징계 등의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제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서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2천 명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③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 ④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내용을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